

03 | 04 2009 | Vol.07



세상사는 풍경 | “다 같이 살아야 하는 세상인데 서로 도와야지”

04

특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국을 만든다!

ACRC Focus I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

08

ACRC Focus II | 한국의 ‘청렴도 평가제도’가 세계를 누빈다!

11

ACRC Focus III | 학교 마당의 부패 뿌리 뽑는다!

12

통

소통

해외 청렴 리포트 | 청정한 자연만큼 청렴한 나라 ‘뉴질랜드’

16

국민생활공감

행복한 변화 | 공공요금도 카드로 낼 수 있게 해주세요!

20

솔로몬의 선택 | 운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우선 적용해야

22

고충처리 카페 | 산마구교 확장 공사 사건

24

민원실 풍경 | 보이지 않는 목소리, 보이스피싱이 당신을 노린다!

26

기분 좋은 편지 | 부정부패는 청소년들에게 빼돌려진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28

기분 좋은 만남 | 부정부패 척결, 우리 손 안에 있소이다!

30

청렴예찬 | 제 1 회 국민신문고 대상 부패방지 우수기관 ‘병무청’

32

아름다운 약속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금지

35

感

여유

여행의 재발견 | 예향의 도시 강릉 오죽헌을 찾아서

38

문화로 보는 세상 | 역사의 상처는 지지 않았다! 영화〈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42

돈 버는 방법 | 노후 대비는 바로 지금부터

44

생활법률110 | 직장 여성들이여! 당당하게 아이를 갖자

46

ACRC NEWS

48

국민 참여 마당

50



“다 같이 살아야 하는 세상인데
서로 도와야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떡볶이를 사이에 두고 떡볶이 가게 주인 김정연 할머니(93)와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한창이다. 두 평 남짓한 가게가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다. 서울 종로구 금천시장의 터줏대감, 김정연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시장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참새방앗간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떡을 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머니는 오늘도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는 동네 아이를 불러서는 어김없이 떡볶이를 건넵니다. “매일 이렇게 주시면 안된다”는 아이 엄마의 말이 무색하게 아이는 “잘 먹겠습니다”라며 배꼽인사를 한다. 동네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쥐어주는 것이 할머니의 낙(樂)이다.

“이 동네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야.”

‘떡볶이 할머니’로 불리는 할머니는 50여 년 동안 금천시장을 지켜왔다. 긴 시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 처음에는 채소를 팔았고, 나물과 달걀을 팔아 모은 돈으로 꽃 장사를 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자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떡볶이 가게를 연 것이다.

할머니는 그로부터 20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고 계신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요즘 할머니가 하루 버는 돈은 1만 원 안팎. 여기서 재료 값을 제하면 할머니 손에 남는 돈은 단돈 2,000원이다.

1. 우리 쌀로 만든 할머니 표 간장떡볶이
2. 20여 년 동안 매일같이 떡을 썰어온 할머니의 손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돈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해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김정연 할머니

할머니는 3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벌이는 유산기부운동 ‘행복한 유산 캠페인’에 참여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다. 한겨울을 전기담요에 의지해 보내고 밥상에는 오직 밥과 된장국만 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전세금 800만 원과 예금 1,500만 원을 내놓은 것.

“그까짓 것 뭐 대단한 일이라고, 고춧이 얼마나 된다고 소란이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돈 있으면 뭐하누.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돈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해.”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남을 돕는 일이라면 아까운 줄 모르시는 할머니는 동네 가난한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밥을 사주며 위로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을 써달라며 장기기증서에 서명까지 했다. 그것도 30년 전에 말이다.

“내가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북에 있는 내 아이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나처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할머니의 고향은 개성이다. 한국전쟁 때 실종된 남편 대신 공장을 꾸리며 서울 동대문 시장에 물건 대금 받으러 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 했다. 북에 있는 세 아이들과 생이별을 한 할머니는 아직도 아이들 모습과 고향 풍경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연세가 아흔 셋인데 이렇게 장사하시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힘들면 이렇게 허리 한번 꺾 펴면 괜찮아져!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라며 크게 웃는다.

일하고 돌아와 여느 때처럼 잠들었다가 그 길로 떠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는 김정연 할머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국을 만든다!

*08 ACRC focus I 기업하기 좋은 환경,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

*11 ACRC focus II 한국의 '청렴도 평가제도'가 세계를 누빈다!

*12 ACRC focus III 학교 마당의 부패 뿌리 뽑는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가 외국인 기업활동과 외자유치 확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패를 감시하고 청렴 윤리 의식을 강화하여 국가 청렴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가 최근 주한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의 청렴 정책 현장을 따라가 보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2일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소개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국기업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행사에는 태미 오버비(Tami Overby)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 장 마리 위르띠제(Jean Ma-rie Hurtiger) 유럽상공회의소(EUCCK) 회장, 조셉 마일링거(Josef Meilinger) 지멘스 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외국기업 CEO와 외국인 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등 각종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 오늘 자리는 우리 국민권익위가 소통창구로서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불편한 사항을 수렴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의 기초연설로 정책설명회는 시작됐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외국인 기업활동과 외자유치 확대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청렴한 나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직부패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국가 이미지와 대외신인도,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공무원들이 부패한 사회는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일 수 없다. 그런 곳에 외국 기업들이 섣뚱 투자할 리도 없다. 부패문제 해결이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임을 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이 타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에게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이 3월 12일 열린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주한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는 연설을 통해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에 기대를 내비쳤다.

국민권익위는 정책설명회에서 기업경영과 연관성이 높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열린 외국기업인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시한 애로사항 및 정책제안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를 소개했다.

외국인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

민원신청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의 이용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국민권익위는 16개 부처 총 3,142건의 민원서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외국인등록번호로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다.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세·세무·공장 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등과 관련한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국세청·행정안전부 소관의 주요 민원서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통합전자민원창구인 G4C(www.egov.go.kr)를 통해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 사실증명' 2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신청범위를 122건으로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세청 등과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관공서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차원에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일선 동사무소 담당자가 외국인 장애인 표지 발급 절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외국공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민원 전담창구인 기업옴부즈만을 새롭게 개설했다. 앞으로 외국기업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정책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여 부패문제뿐 아니라 주한 외국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각종 고충 해소 창구로서의 국민권익위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외국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묻는다!

지난 3월 12일 열린 주한외국기업인 정책 설명회에서 제기되었던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에 관한 질의와 응답을 요약·정리했다.

Q 국민권익위 주관 외국기업 윤리담당관회의,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청렴협약 제정·이행 지원 및 감독 등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향후 방향은 무엇인가?

플로리안 스투에르발트 (지멘스코리아 변호사)

A 국민권익위는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 및 '기업투명성 자기진단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나 기업윤리지원 관련 활동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윤리경영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을 포함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기업 윤리담당관 정책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Q 횡령, 사기 등 불법행위를 범하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해고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윤리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존 권(오티스엘리베이터 코리아 법률고문변호사)

A 사용자가 근로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해고하는 유형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직권면직, 범법의 정도가 낮은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고 징계의 수준은 사건별로 다르며 사회의 전반적인 준법정신 수준, 노사관계 문화,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기업에 큰 피해를 주는 기업의 비밀누설, 업무상 횡령, 절도, 배임, 금품수수 등의 경우 계약서상 당사자 간의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해고로 보나, 가담자 사이의 형평성 결여, 노조 와해의 목적으로 해고할 경우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노사관계 문화, 준법수준과 관련된 경우 기업 내부의 윤리규정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Q 뇌물을 제공한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엠바고(거래 중단)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정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부산 소재 외국기업 관계자

A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법으로 우리정부는 「국

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이행하고 있으며 외국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것이다.

Q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경제수준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윤리의식 제고 및 기업대상 윤리강령 등 교육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재욱(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A 국민권익위는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 '기업투명성 자기진단모델'을 개발하고 지난 연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제작·배포하였고, 향후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부패방지 노력 및 제도개선 활동 외에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Q 공무원행동강령상 향응·접대 기준(3만 원 이하)을 현실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조셉 마일링거 (지멘스코리아 사장),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A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동강령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하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무관련자'에만 해당된다.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 재계로부터 물가 상승 및 외국의 문화 등과 비교하여 3만 원 기준이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3만 원 기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취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Q KOTRA 외국인투자유무부조만과 국민권익위가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레고리 버튼 (주한 미국 대사관 부참사관)

A 외국인 투자자를 돕고자 하는 취지는 같다. KOTRA는 외국인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며, 국민권익위는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및 행태상의 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한다. 향후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사업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국민권익위에 제기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Anti-Corruption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Bhutanese Officials

July 31 - August 13, 2008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의 '청렴도 평가제도'가 세계를 누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로 정책 활용도 높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정책인 청렴도 평가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탄 정부에 의해 벤치마킹 된다.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로 더욱 청렴해질 부탄 정부를 기대해본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불교왕국으로, 최근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경제적 개혁을 충실히 진행 중에 있으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07년부터 UNDP(유엔개발계획)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하나로 부탄에 주요 반부패 제도의 운영 매뉴얼 제공, 공무원 연수, 현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제도를 전수해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부탄 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개선, 청렴도 평가, 청렴 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부탄 정부는 부패 수준 측정 등을 위해 지난해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조사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고 객관성 및 신뢰성 미흡 등으로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부탄은 한국 국민권익위가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으로 주요 정부 부처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2009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부탄 정부가 청렴도 평가 수행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요청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탄 공무원 5명을 초청,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 동안 청렴도 평가 분야의 연수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탄 공무원들에게 평가 대상 기관, 업무 선정, 설문 조사 표본 추출, 설문 결과 분석 등 실무 위주의 강의를 실시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청렴도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청렴도 평가가 실제로 각 기관의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제도를 2007년에 도입,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현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해 청렴도 평가제도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려 호평을 받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전세계로 전파될 전망이다. 🌍



학교 마당의 부패 뿌리 뽑는다!

권익위, 3월 19일 교육부패 근절대책 발표

청렴사회가 실현되려면 청렴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청렴문화 정착에는 교육분야 부패척결이 선결조건이다. 자라나는 세대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청렴문화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현금·상품권·선물 등을 제공한 비율이 18.6%에 달할 정도로 교육분야의 부패정도는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3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양천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제도개선과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국민권익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촌지 및 인사비리,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대학특성화 사업비', '교육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비(BTL)'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비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각종 학원의 설

립 및 운영' 과 관련된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 내에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교육분야 중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대상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철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신학기 초, 스승의 날, 추석명절과 같은 취약시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기관으로 밝혀진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촌지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근 부패방지부 부위원장이(오른쪽부터 세 번째) 지난 3월 10일 관계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지원예산(보조금) 누수방지

국민권익위는 수급자가 보조금을 실제 수령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급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수급자나 비리공무원, 부당위탁시설 등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을 운영할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복지예산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금 집행 담당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아래 조사는 올해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국민권익위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초·중·고 자녀를 두고 있는 전국의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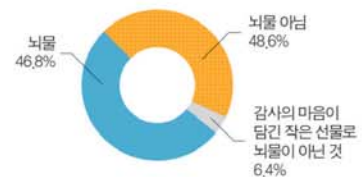
조사시기 : 2009년 3월 4일~8일간(5일간) | 조사대상 : 전국의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닐슨컴퍼니코리아) | 신뢰수준 : 95% ± 2.4%p



학교촌지에 대한 인식 및 용인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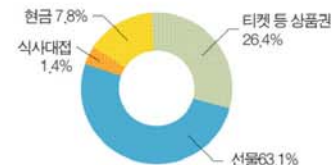
초·중·고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중 46.8%는 학교촌지를 '뇌물'로 보고 있으며,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 역시 46.8%,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뇌물이 아닌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6.4%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촌지 제공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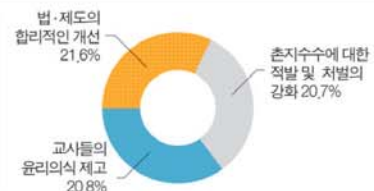
지난 한해 동안 학부모들이 교사나 교직원에게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률은 선물(63.1%), 티켓 등 상품권(26.4%), 현금(7.8%), 식사대접(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촌지제공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은 '티켓 등 상품권' (57.0%), '현금' (18.7%) 순으로 예상



학교촌지 관행의 개선방안

촌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21.6%),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20.8%), 촌지수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강화(20.7%)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16 해외 청렴 리포트
- 20 행복한 변화
- 22 솔로몬의 선택
- 24 고충처리 카페
- 26 민원실 풍경
- 28 기분 좋은 편지
- 30 기분 좋은 만남
- 32 청렴예찬
- 35 아름다운 약속





通, 소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합니다’

누군가 한 남자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사랑하는 딸 아이가 까르르 하고

소리 내어 웃을 때’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은 질문을 한다면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웃을 때’ 라고 답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중심에는 ‘행복한 국민’이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 하는 그날을 위해

매일, 매시간, 국민들의 생활을 공감하겠습니다.

通

해외
청렴
리포트

청정한 자연만큼

청렴한 나라 뉴질랜드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만큼이나 깨끗하기로 유명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 바로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 10점 만점에 9.3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뉴질랜드, 그 이유를 살펴본다.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뉴질랜드 최대의 레포츠 명소인 퀸즈타운의 변화가



뉴질랜드는 부패인식지수조사에서 9.3점으로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없는 가장 깨끗한 나라로 뽑혔다. 세계 No.1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뉴질랜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법이라도 존중하는 국민성과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기관에 보내는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청정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 뉴질랜드. 하얀 양떼가 노니는 푸른 초원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의 숲,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이 그렇고, 목축 등 1차 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구조가 그렇다. 뉴질랜드 어디를 가도 산업공해나 오염이라는 말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다른 세상의 말로 들릴 뿐이다. 잠시 뉴질랜드에 다녀간 사람 모두 그것 하나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자연뿐만이 아니다. 자연만큼이나 깨끗한 뉴질랜드의 사회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한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뉴질랜드의 청렴도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세계은행 등 7개 독립기구가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설문조사해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뉴질랜드는 항상 깨끗한 나라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결과 뉴질랜드는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와 공동으로 10점 만점에 9.3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부정사건 수사국 SFO

매년 뉴질랜드가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부패 사건, 규모가 큰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SFO, Serious Fraud Office)도 한 몫 한다.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은 중대하고 복합적인 부패혐의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무장관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은 부패 사건이나 부정한 정치 자금 관련 수사보다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횡령 사건 등은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며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보기도 어려운 실정 때문이다.

“뉴질랜드 공직사회가 깨끗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정직과 정치적 중립성,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1.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SFO) 입구 2.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업지역의 평일 오전 모습. 오클랜드에서는 가장 번잡한 곳이다 3. 뉴질랜드의 푸른 초원위에 방목되고 있는 양떼들 4. 그랜트 리델 SFO 국장이 뉴질랜드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공직사회가 깨끗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게 정직과 정치적 중립성,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랜트 리델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 국장(Grant Liddell, Director of Serious Fraud Office)은 말한다.

그는 공직자들에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봉급을 주고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진리가 생활 속에서 구현

무엇이 이처럼 뉴질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것일까? 단순히 자연만큼이나 사람들도 깨끗하고 착해서일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모두 넉넉해서 남의 것이나 공짜를 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처벌이 두려운 것일까?

그런 면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는 제도와 교육, 가치관 등이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의 경우 가장 먼저 갖추어 할 덕목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와 정직성이 권장된다는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사회의 투명성이 매우 높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나이, 적고 많음을 따지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은 뉴질랜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평화로운 나라 뉴질랜드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기도 하다. 총리에서부터 초등학교생에 이르기까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불과 일곱 살짜리 아이도 학교에서 잘못하면 정학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뉴질랜드이고,



3

공무 중인 총리가 탄 차량도 과속으로 단속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뉴질랜드다. 한국 사회에서 일곱 살짜리 아이에게 학교 규율을 적용해 그런 식의 제재를 가했다가는 융통성 없는 어른으로 매도당할지도 모른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아무래도 미성년자에게는 ‘선도’라는 부드럽고 온기가 느껴지는 방법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7월에 있었던 일이다. 헬렌 클라크 당시 총리는 수형원들과 차량 편으로 지방을 시찰 중이었다. 그날 저녁 클라크 총리는 수도인 웰링턴에서 열리는 럭비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급히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으로 달려가 웰링턴 행 국내선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총리 차량 운전사는 비행기 이륙시간에 늦지 않도록 제한속도를 넘겨가며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총리 차량 운전사와 경호를 맡았던 경찰관 등은 재판에 회부돼 과속과 위험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도덕성이 공직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법의 집행에 관한 뉴질랜드 사회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잘못한 행위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뉴질랜드에서 보편적인 가치임을 보여준다. 뗏뗏치 못한 핑계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은 좀처럼 용납되지 않는다.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뭇가를 단속할 때 흔히 ‘제로 톨러런스’ (Zero Tolerance :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라는 말부터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봐주기 없으니깐 선처 따위는 기대하지로 말라’는 말이다.

그런 까닭에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거나 억울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이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은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정직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격려

오랫동안 뉴질랜드 경찰에 몸담았던 한 경찰관은 이런 말을 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부패하기 쉬운 집단 가운데 하나인 경찰이 뉴질랜드에서는 부패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인사들과 유착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근무지를 자주 바꾸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 덕분에 경찰에 몸담고 있는 30여 년 동안 뉴질랜드 여러 도시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자랑했다. 한국으로 치자면 대구, 대전, 서울, 제주를 돌아다니며 경찰관 생활을 한 것이다.

슬하에 7남매나 둔 그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며 교육시키는 데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고마워할 정도였다.

몇 년 전 뉴질랜드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 이사장이 당시 뉴질랜드 총리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호주 전직 총리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회사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다. 방송국 이사장이 정치인들과 식사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일 뿐 업무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비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논리였다. 뉴질랜드가 투명성이 높은 사회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세계 No.1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뉴질랜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법이라도 존중하는 국민성과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기관에 보내는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우리들 또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힘쓰는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다면 좀 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通

국민
생활
공감

행복한
변화

“공공요금도 카드로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 마련해 권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제안공모 결과 역시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금 용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해주세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한다고 하면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위의 제안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데 신용카드를 허용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 전화, 직장의료보험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0년부터 개별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2005년부터는 심야전력(갑)요금(3kw 이하)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민원을 외면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면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국민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권고 예정

현재 국세·관세·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국세와 관세는 2008년 10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지방세의 12.5%가 신용카드로 납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지켜보자. 🌈

“운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우선 적용해야”

혈액측정치 대신 호흡측정치 적용 면허취소는 위법

네온사인 화려한 다운타운의 밤거리는 두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때 대개의 음주측정은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재는 호흡측정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경우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혈액으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있음에도 이보다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채혈측정을 한 이상 '채혈측정치를 우선 적용' 하는 것이 마땅해

장모 씨는 2008년 9월 11일 밤 11시 21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0.1%를 넘는 0.106%가 나왔다. 장씨는 측정 직후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로부터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12일 새벽 1시쯤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했다. 경찰관이 이에 응해 적발지점으로부터 149분 뒤인 새벽 1시 50분쯤 장씨의 혈액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0.05% 이상 0.1% 미만 사이인 0.077%로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에 '음주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채혈은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지침에 따라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장씨는 “경찰관이 채혈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혈액채취를 했고, 그 결과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호흡측정치에 근거해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에서 채혈측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음주측



정 및 측정결과에 대해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관이 운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한 이상 '채혈측정치를 우선 적용'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

그렇다면 채혈측정이 호흡측정과 갖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채취한 혈액측정치로 운전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때는 '위드마크공식(호흡측정, 채혈측정, 채뇨측정 등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로 최종 운전시점부터 측정(호흡 또는 채혈 등)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자연 감소치를 추정하는 데에 이용되는 보완적인 방법임)'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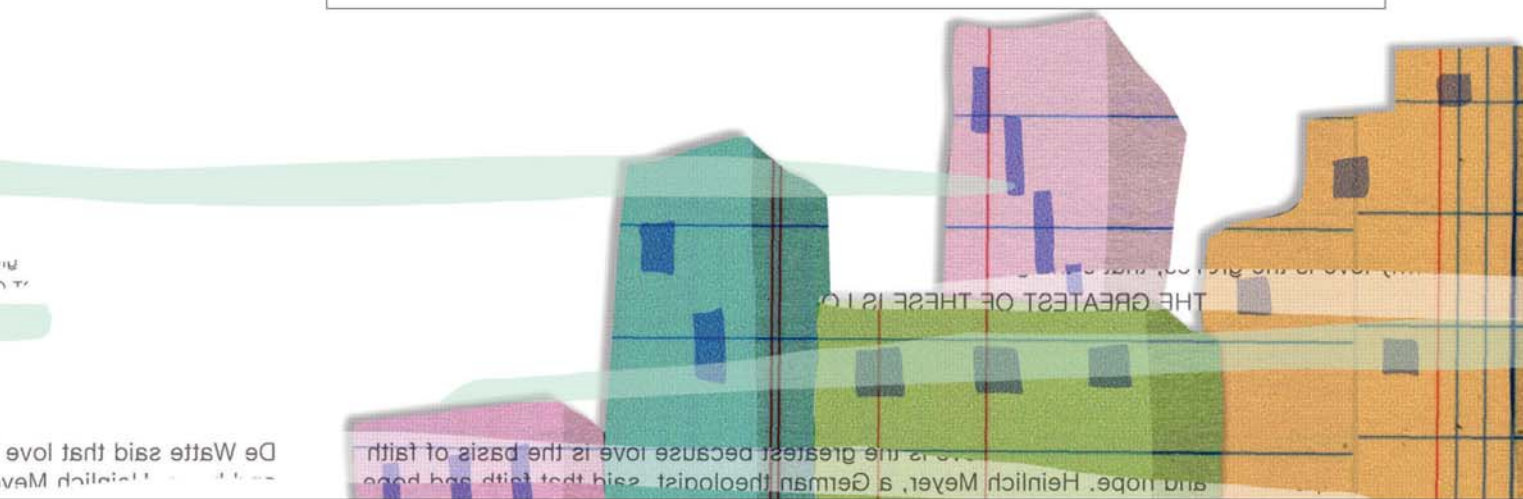
즉 운전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치를 계산해 당초의 혈액측정치와 합산하는 것이다. 위드마크공식에 따르면 대체로 시간당 혈중 알코올 감소치는 신체적 상황에 따라 0.03~0.008%이다. 이 때 경찰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해 운전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정해야 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 사건의 경우, 혈액측정치가 0.077%에다 단속 당시부터 채혈 시까지 149분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의 자연 감소치를 더하면 장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로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0.100%에 미달해 면허취소 대상이 아닌데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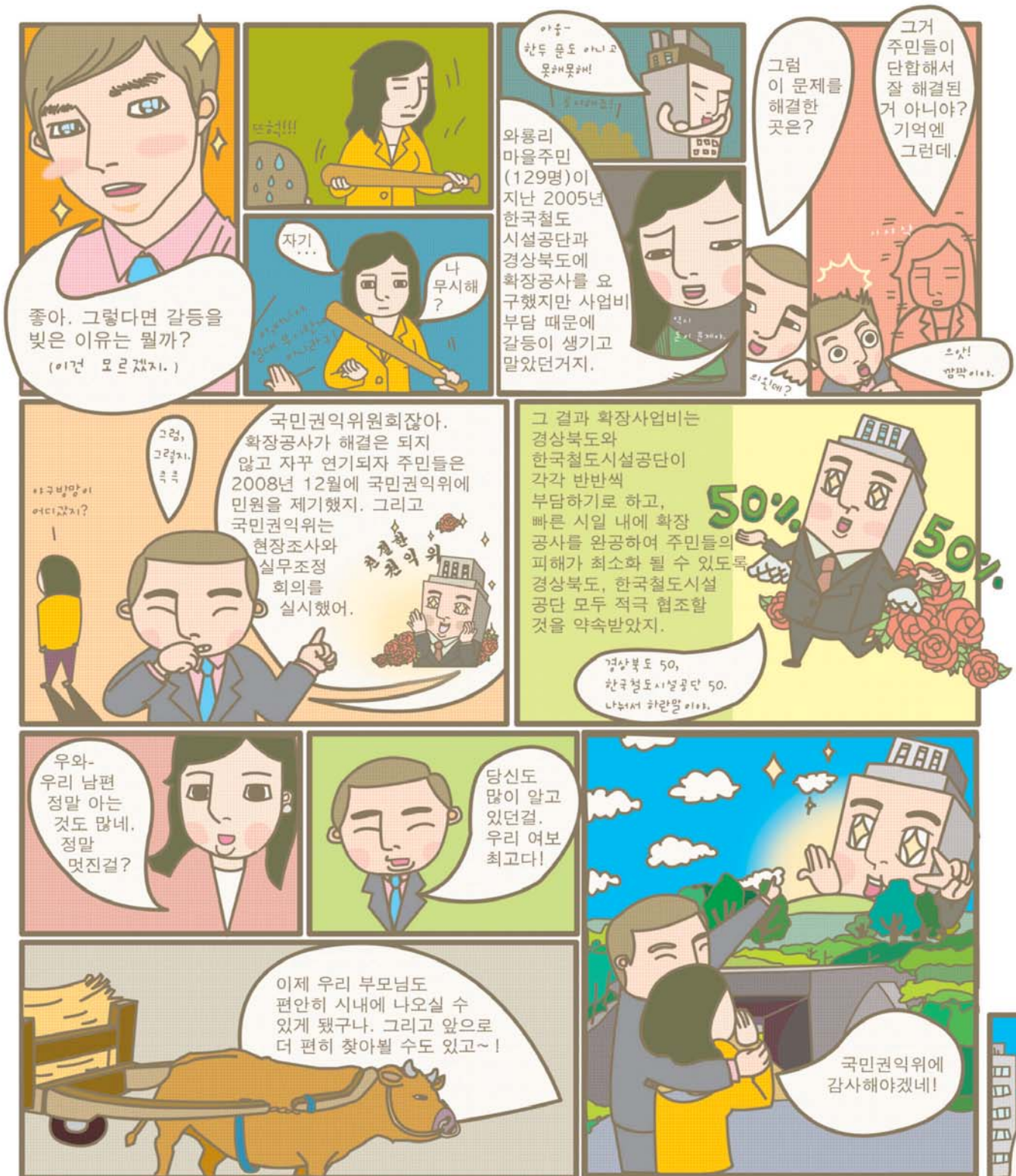
그러나 장씨는 운전면허취소만큼은 면했는지 몰라도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와 그에 상당하는 벌금 등의 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

Tip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요즘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채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이'가 인사 드립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인 '보이스피싱', TV를 통해 한번쯤 들어보셨죠? 그거 아세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칭이 전체 신고건수의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기수법과 피해에 방·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법! 그럼 지금부터 국민이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 '보이스피싱'이 당신을 노린다!

'우체국 택배' 사칭 최다,
'정부보조금 주겠다' 불황 틈탄 신종수법도 등장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디선가 다음과 같은 ARS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가 온다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보세요!

보이스피싱 유형 01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우체국 직원 사칭형'

A는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고객님의 발송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 번을 누르세요"라는 ARS 멘트가 나오는 전화를 받았다. 9번을 누른 A는 카드가 반송되었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묻는 우체국 직원에게 "그런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그러자 상대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잠시 후 A는 ○○경찰서를 사칭한 상대방으로부터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보안조치를 받기 위해 돈을 입금하였다.

보이스피싱 유형 0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세금을 환급 받으라는 '환급 빙자형'

B는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고객님의 초과 납부하신 보험료 ○○만 원을 환급해드리고자 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 번을 눌러주세요"라는 ARS 전화를 받는다. 9번을 누른 B. 보험공단을 사칭한 상대는 신상조치를 해야 하니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상담전화번호를 줄 테니 휴대폰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잠시 후 B는 자주 이용하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갖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환급 받으라는 보험공단 측의 전화를 받는다. 그들은 B에게 카드를 넣고 '이체'를 누르게 한 다음, 자신들이 말하는 계좌번호를 누르게 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자금을 이체 받았다.

그 외에도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자녀가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기수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어요. 무작위로 전화하던 초창기 수법과는 달리 메신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친구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지인으로 가장,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법원통지서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해 믿게 한 후 사기전화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또한 경제불황을 이용해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사칭하는 신종수법까지 생겼다고 하니 더 조심해야겠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오는 것으로 ARS 전화를 사용하며 통화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말투가 어눌하며 주로 북쪽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방의 말투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자, 그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2. 동호회 사이트 등에 회원주소를 신지 않는다.
3. 자녀의 친구나 담임교사 연락처를 확보해 둔다.
4.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금융기관은 없다.
5.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6. 동창생, 종친회원의 입금요구 시 본인인지 확인한다.
7. 낯선 국제전화나 발신자가 없는 전화는 의심해 본다.
8. 걸려온 ARS 전화로 상담원을 연결을 하지 않는다.
9. 입출금 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10. 보이스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

출처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통화 후 전화금융사기라는 의심이 들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국번 없이 110번)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

“부정부패는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도관 납품 관련 부정부패를 신고한 최한국(가명)입니다. 저는 사건해결 후 아무 탈없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패방지부 심사과의 강형석 조사관님을 비롯 국민권익위 덕분이라 생각하여 늦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수도관 납품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가 중국산 반제품 상수도 주철관을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정부에 납품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리 뒤에는 공무원도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고요. 평소 ‘정직하게 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살아왔던 저이기에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말을 믿어 줄까?’ 하고 불안하여 신고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강형석 조사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강 조사관님을 처음 봤을 때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저는 강 조사관님이 오랜 수사관록에서 우러나오는 눈빛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하신 분임을 단박에 알아 볼 수 있었고 그제서야 신고 후 가졌던 불안함이 다소 사라지는 것 같았죠.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며 내미신 강 조사관님의 따뜻한 손은 저에게 참 많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먼저 조사관님은 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배경, 증거관계 등을 물어보았고, 특히 제가 피신고자들에게 노출될까봐 불필요한 신분노출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리와 관련된 관



세척 수입관련 자료, 조달청 납품 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저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조서관님의 신속하고 발 빠른 조사로 제가 신고한 사건이 철저히 파헤쳐졌고 국민권익위의 지원과 노력으로 83억 원 부당이익 편취, 공무원 120여 명이 연관된 6억 8천만 원의 뇌물상납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거대자본의 비리가 드러났고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주세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야말로 정직하게 땀 흘리는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선진국가란 각종 경제지표에서만 상위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높은 도덕성과 낮은 부정부패 발생 비율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가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실행하는 각종 정책과 노력들, 그에 따른 업적들이 널리 알려지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 정권도 주요 국정 운영과제의 하나로 부정부패척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에 저의 바람이 이뤄지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여 매우 다행스럽고요. 국민권익위가 추구하는 고귀한 목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로 청렴국가의 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신 강 조서관님 같이 강직하고 유능한 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등불이자 곧 희망입니다. 양 건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국민권익위 직원 분들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국(가명) 드림

고 마 워 요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국민권익위원회로 인해 민원을 해결하셨던 분들의 가슴 따뜻한 사연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 대변인실 <국민권익> 담당자 앞 e-mail : junmin79@acrc.go.kr

부정부패 척결, 우리 손 안에 있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심사과 강형석 조사관

부정부패근절은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기있는 신고인, 그 신고인의 든든한 안내자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8년 2월에 있었던 상수도관 납품비리에 대한 사건이 그 실례이다. 기업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3개월간 뛰어다닌 강형석 조사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신고자의 감사편지(본지 28쪽 참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2008년 2월, 국민권익위 부정부패신고센터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어느 한 기업의 상수도관 납품비리에 대한 신고였다. 이 기업이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다음, KS인증(한국산업표준규격)을 받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사건을 전달받은 부패방지부 심사과는 편지 내용상 사건의 규모가 크고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수사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강형석 조사관에게 사건을 배정했다.

신고자와 조사관의 '신뢰'가 사건 해결의 열쇠

부패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자와 조사관의 '신뢰'를 형성하여 신고된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믿음은 필수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피신고자의 진술은 직접 들을 수 없고, 만약 관련 기관이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면 강제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없다.

“이번 신고자는 해당 기업을 다녔던 내부고발자였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고자에게 신분보장은 확실히 해주겠다는 믿음을 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패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신변의 위협 또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고자보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드물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 보호보상과에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있다. 만약 신고자가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보호보상과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 또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직접 연결하여 신변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회의를 하고 있는 부패방지부 심사와 사람들

부정부패 근절 위해선 부패
신고 활성화 되어...

부정부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방향제시, 국민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고자는 강 조사관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KS인증 관련기관, 관세청, 조달청 등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진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KS인증 관련 기관에 가서 해당 기업 제품이 KS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관세청에서 수입관련 자료, 조달청 납품현황, 상수도 사업본부 등 공사 발주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84억 원의 비리액수와 1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번 사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민권익위, 감사원 같은 감사기관이나 사정기관 등에서 공직부패를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부정부패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비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이 착잡해지더군요.”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방향제시, 국민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용기있는 부패신고자와 심사과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부정부패를 해결한 수사기관의 노고에 대해 칭찬한다. 그러나 그 뒤에 부패방지부 심사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비록 주연은 아니지만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들이 있기에 깨끗한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듯하다. 🌱

Tip 부정부패 신고방법(문의 : 국번 없이 1398번)

부정부패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2-360-6879),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약 격오지 거주·고령·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방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1 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부상으로 받은 신문고를 박종달 병무청장이 임직원 앞에서 시타하고 있다

청렴을 조직문화로 꽃 피우다

제 1 회 국민신문고 대상 부패방지 우수기관 **병무청**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고 했다. 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지침을 적은 목민심서에 나온 말로서 모든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덕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이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덕목이 되는 요즘 '청렴'을 조직문화로 꽃 피워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2008 부패방지시책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있으니 바로,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이다. 청렴시책을 추진 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을 찾아가 '청렴병무청 10년'을 달성한 청렴에너지에 대해 들어 본다.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사람들



업무를 지사하고 있는 김태훈 감사담당관

청렴의 생활화로 달성한 청렴병무청 10주년

병역이 국민의 의무인 우리나라에서 병무청의 의미는 좀 특별하다. 따라서 병역과 관련한 각종 청탁이 오갈 수 없도록 청렴의식을 높이고 각종 부패사건을 척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무청 직원들은 [Today 3728일] [Today 3729일] [Today 3730일]... 하루하루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청렴일 수를 보며 병무청 직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방식에 자부심을 느낀다. 매일 컴퓨터에서 카운트되는 청렴일 수는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카운트를 멈춘 적이 없다. 즉, 직원이 연루된 병역비리사건이 그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노력 덕에 병무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2008년 9월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ISO 10002(고객만족경영)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중앙행정기관 민원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11월에는 박종달 병무청장이 월간중앙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21세기 경영리더(고객만족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12월에는 기관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올 2월에는 부패방지시책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특히 부패방지시책 종합우수기관 표창은 부패방지 분야에서 정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수상한 것으로 청렴병무청 10주년을 맞이한 병무청의 청렴실천력을 엿볼 수 있다.

참여와 경쟁을 통해 청렴의식을 몸에 익힌다!

"청렴교육 UCC 경진대회나 청렴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자체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지킴-e'를 개발·운영하여 민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 청렴이 직원들에게 체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고 백종훈 주무관은 말한다. 그 밖에 청렴신호등 확인의 날, 청렴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렴 병무인 선정, 클린신고자 보상제 등 재미와 보상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을 생활화해 온 병무청은 지난해 실시한 청렴교육 UCC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렴교육 UCC 경진대회란 소속기관별로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렴교육 UCC를 제작하고, 제작된 UCC를 내부통신망인 다모아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 시청 후 평가하며 평가결과 우수한



1. 청렴시책 성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2.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D로 제작한 UCC 경진대회 출품작

청은 시상을, 청렴교육 UCC를 시청한 직원들에게는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다수 지방청에서 UCC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열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역할극에서부터 미니 다큐, 플래시 애니메이션까지 형식도 다양한 13개 전 지방청의 UCC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딱딱한 소재를 재미있고 가슴에 와 닿는 콘텐츠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수동적인 강의식 교육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아 조금은 정체되었던 청렴교육에 새 기운을 불어일으켰다는 백종훈 주무관은 ‘하지 말라’는 식의 다소 부정적이었던 청렴시책이 ‘이렇게 하자’라는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참여와 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UCC 경진대회 외에 자체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지킴-e’ 또한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이 자랑하는 청렴시책이다. 청렴지킴-e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인력·예산 증원 없이 구축하였다. 민원처리가 종료된 민원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요구가 있었는지 설문문을 받는 것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금품·향응의 요구 및 제공여부 뿐만 아니라 병무청에 대한 청렴 이미지, 친절성, 공정성, 만족도, 이의제기 용이성 등을 같이 조사한다. 이와 같은 상시 모니터링 결과 2008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8개 평가지표 전 부분 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반부패 교육, 반부패인프라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등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섬김의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시 친절성과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는데, 이는 청렴시책이 단지 직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병무민원인들에게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미 부임 초기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병무청이 나아갈 길이라는 국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고객만족경영 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10002 인증을 획득한 것도 청렴시책을 충실하게 따르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기관의 청렴도는 모든 국민에게 인식되어 그 기관의 이미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부패 제로, 클린 병무청을 외쳐도 국민과 외부기관의 평가가 좋지 못하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감동하는 병무행정을 위해 청렴과 친절은 기본이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금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K씨.

곧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그리 기쁘지만은 않다. 입주 날짜가 다가올수록 밀려드는 잔금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다.

K씨는 계약 당시 이미 계약금을 대출 받았고, 높아져만 가는 금리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래저래 한숨은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다.

고민하던 K씨는 부하직원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다.

“미안한데, 내가 잔금을 내야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전세를 내놔도 소용이 없네.

혹시 여웃돈 가진 것 좀 있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힘드시죠? 다행히 제가 적금 탄 게 있는데 그 돈을 일단 빌려드리겠습니다.”

K씨는 빌린 돈으로 잔금을 냈으며, 급한 마음에 기관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K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感, 어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봄 비에서
봄 바람에 실려 온 향긋한 꽃내음에서
하늘하늘 나부끼는 치맛자락에서
어느덧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란 새싹이 두터운 땅을 박차고 깨어나듯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다가온 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38 | 여행의 재발견
- 42 | 문화로 보는 세상
- 44 | 돈버는 방법
- 46 | 생활법률110





율곡의 청렴한 향기가 한국의 혼을 짓다

예향_{藝鄉}의 도시 강릉 오죽헌을 찾아서

16세기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을 토착화시킨 율곡 이이 선생은 학문에만 전념했던 학자이기보다 현실정치에 참여한 경세가(輕世家)였다.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알면 행해야 한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몸소 실천한 이이 선생. 그의 이러한 사상이 만들어진 근본을 찾아서 강릉 오죽헌으로 가 보았다.

見得思義^{견득사의}는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보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율곡 선생이 황해도에서 공부할 때 양식이 없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 최 립이 쌀을 보냈는데 이 쌀이 친구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고를 축냈다고 생각하여 즉시 돌려보낸다. 見得思義^{견득사의}를 중요시한 율곡 선생의 청렴정신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이 태어난 오죽헌

바다와 가까이 있는 강릉은 참 오묘한 색을 여럿 품었다. 정동진을 비롯해 100여 리에 걸쳐 펼쳐진 강릉 해안의 해돋이와 병풍 같은 대관령을 보노라면 관동팔경 중에 제일이라 불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뿐이 아니다. 율곡 이이 선생부터 신사임당, 허균 그리고 그의 누이 허난설헌까지. 강릉 사람들 말처럼 ‘제일 강릉’을 대표하는 것들은 참으로 많다. 그중에서도 일명 ‘모자화폐’로 불리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의 태생지인 오죽헌이 제일이 아닐까.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오죽헌(烏竹軒)은 우리나라 주택 건축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의 하나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양식에서도 훌륭한 구조를 갖춘 대표적인 건물로 보물 165호로 지정되었다. 단순한 주택인 오죽헌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오랜 역사성과 구조의 우수성, 이이 선생의 태생지 등 이유는 많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한국정신문화의 대표인 성리학을 대변하는 역사 현장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1. 오죽헌 경내에 핀 백일홍을 바라보는 사람들 2. 오죽헌 경내에 있는 사랑채 전경

자경문을 지나면 곧장 오죽헌 광장으로 들어설 수 있다. 오죽헌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 건물로 4칸짜리 대청과 2칸짜리 방과 마루로 구성돼 있다. 대청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천정은 고미반자를 두었으며 삼면은 창호 문으로 둘러싸였다. 조선전기 민가의 별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건축학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곳은 신사임당이 흑룡이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울곡 이이 선생을 출생한 '몽룡실'이 있다.

더욱이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태생지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이이 선생의 외가로 대대로 아들이 없는지라 아들잡이로 들인 사위와 손자에게 대물림하였다. 이것은 훗날 이이 선생의 사상에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한 원인이다. 예부터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아들이 없어 둘째 딸인 사임당을 아들처럼 키우고자 여러 학문을 가르쳤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임당은 문장, 침공, 자수뿐만 아니라 시문, 그림에도 뛰어난 우리나라 제일의 여류 예술가다. 그래서 울곡 이이는 그러한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특별히 스승을 두지 않았다.

웅골찬 선비로서의 소명을 다하다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이 선생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이미 8세 때에 동쪽하늘에 달이 뜨는 것을 보고 “산은 둥근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삼키는구나”라고 시를 지어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13세 어린이가 진사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으나 16세

숲 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생각은
끝이 없어라.

멀리 강물은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
서리맛은 단풍은
햇빛 향해 붉구나.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네.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울음소리 석양의
구름 속에 끌기네.

- 화석정(花石亭)

에 모친이 돌아가시자 3년의 시묘(侍墓)를 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다음해에 하산하여 다시 유학공부에 전념하였다. 23세의 이이 선생은 별시에 응시하여 우주의 진리를 논한 천도책(天道策)으로 장원급제하였다. 평생 아홉 번 시험을 쳐서 아홉 번 다 장원급제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정이 곧은 탓에 29세부터 49세까지 20년 동안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옳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건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판서의 자리도 헌신짝같이 버리고 물러가기를 아홉 번을 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구도퇴관공(九度退官公)'이었다. 선비로서의 강직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이 선생이 선조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세상 사람의 상정(常情: 보통의 인정)으로 말하자면, 선비란 진실로 알미운 자입니다. 선비는 정치를 논하라면 멀리 당(唐), 우(虞)의 고사를 인용하고, 임금에게 간하라면 어려운 일만을 권유하며, 벼슬로 얹어매도 머무르지 않고, 은총을 내려도 즐겨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서적 편찬을 통해 성리학을 집대성하다

이처럼 당대 최고의 경세가로서 임금에게 직언하며, ‘뜻이 서 있지 않고는 원하는 생을 살 수 없고,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이이 선생의 소신은 오죽헌 경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죽헌 원편에 세워진 율곡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문성사(文成祠)의 ‘문성(文成)’은 1624년 인조임금이 이이 선생에게 내린 시호로 ‘도덕과 사물을 널리 들어 통했고 백성의 안위를 살피 정사의 근본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이이 선생은 바쁜 관직생활을 하면서도 『성학집요』, 『격몽요결』 등 주옥 같은 서적을 편찬했는데,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이이 선생의 평소 소신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격몽요결』은 성리학의 근본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워야 하며, 신하는 충성해야 하고, 부부는 유별해야 하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고, 어린 자는 나이가 많은 자를 공경해야 하고, 붕우(朋友)된 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유교이념을 구현했다. 이 작품의 친필 원본은 오죽헌 안채 건물 어제각(御製閣)에 유년기에 사용하였던 용연(벼루)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가 현재는 오죽헌 정화사업 때지는 율곡기념관으로 옮겨 전시되고 있다.

이이 선생은 안타깝게 49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하였으나 국가와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여 송담서원을 비롯한 자운서원 등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서원에 배향되었다. 이이 선생은 인간과 우주의 심오한 원리를 기(氣)로 규명한 위대한 철학자요, 소신 있는 정치가이며 교육자로서 영원한 민족의 지도자다. 🌈



● 3. 신사임당과 이이 선생이 생전에 키웠다는 천연기념물 제 484호 율곡매 4. 5만원 권 지폐 발행을 맞아 세운 신사임당 동상



Tip 율곡 이이 선생 오죽헌 가는 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의 태생지인 오죽헌은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201에 위치하고 있다. (Tel. 033-640-4457)

▶ 승용차 이용 시

영동고속도로 → 강릉 IC → 강릉 방향 좌회전 → 홍제 IC → 강릉 시청 앞 좌회전(속초/경포방향) → 경포 방향으로 직진

▶ 버스 이용 시

강릉종합터미널에서 202, 302, 303번을 타고 오죽헌에서 하차



역사의 상처는 지지 않았다!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종군위안부의 삶을 다룬 영화 앞에서 어느 정도 숙연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본에 생존해 있는 종군위안부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1993년 일본 정부를 제소한 송신도 할머니(88)를 스크란을 통해 처음 대할 때도 이러한 감정이 앞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안해룡 감독은 할머니가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과 함께 10년에 걸쳐 벌인 싸움을 담아냈다.

할머니는 16세 때 부모가 정한 결혼이 싫어 혼례를 올린 첫날 밤 도망쳤다. "전장에 가면 결혼 안 하고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전장으로 간 그녀는 종군위안부가 됐다. 하루 수십 명의 일본군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녀의 경험은 당연히 끔찍하다.

"군인들이 전쟁하면서 하고 싶어지면, 여자들을 모아놓고..., 전장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땅에 구멍을 파고 그 위에다 군인들이 쓰는 모포를 깔고..., 그리고 교대로 하는데 각반(군인 등이 발목을 지탱하기 위해 정강이에 돌려 감는 딱딱한 띠)을 감은 채로 해."

영화는 단순히 상처를 해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도록 만든다. 망각으로부터 저항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떠올리도록 만든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 송신도 할머니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는 소박하게 시작한 다큐멘터리였다.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 작품을 상영할 때 안 감독을 만났다. 그와는 오래 전 인연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 왔다. 이 작품이 시작된 것은 외국 동포들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옮겨온 안 감독이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뒤풀이 동영상 편집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영상은 할머니가 전쟁을 반대하는 노래를 부르며 모임 멤버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었다. 할머니의 노래와 분위기에 감동받은 감독은, 할머니와 함께 15년 넘게 함께해 온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행적을 다큐멘터리에 담기



● 다큐멘터리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는 위안부의 삶을 재조명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기시킨다

“어중간하게 하다가 이젠 지쳤느니 뭐니 하면서 그만둔다는 소리 안 할 배짱이 있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빨리 그만둬!”

러가야 하는 책무를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 영화에는 새로운 역사 쓰기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 할머니는 일본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 낸 상고 결과를 기다린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결과일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송신도 할머니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한 사회가 수용하는 사법적인 판단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녀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지지 않았다. 아직은. 🌍

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믿음을 되찾기 시작한다.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전쟁이 남긴 상처가 있다. 옆구리에 칼로 베인 흉터와 팔에 문신으로 새겨진 ‘가네코(金子)’라는 위안부 당시의 이름, 일본군에게 맞아 고막이 찢어진 뒤 생긴 난청으로 왼손에 늘 쥐고 다니는 보청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보청기와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삶 안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시골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온 할머니의 힘겨운 삶은 그녀를 억척 할머니로 만들었다. 1992년 민간단체인 ‘재일 조선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그녀를 찾아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사죄 받고 싶어. 하지만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내가 실실거리지 않는다. 너희들 진짜 결심한 거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볼 자신이 있느냐는 거야. 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은 인간이야. 너희들 어중간하게 하다가 이젠 지쳤느니 뭐니 하면서 그만둔다는 소리 안 할 배짱이 있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빨리 그만둬!”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사랑하게 된 것은 이 대목에서였다. 치열하지 않을 거라면, 어중간할 거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그녀의 당당함은 역사의 패배자가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써내

●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 감독 안해룡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중 ‘커밍아웃’한 유일 생존자인 송신도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보아왔던 할머니들과는 다르다.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모임) 사람들에게는 ‘바늘로 찌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다’란 인상을, 기자들에게는 ‘아주 거칠어 보였고, 피해자답지 않은 분노와 웃음...’ ‘거침없는 말의 위력을 지닌...’ ‘마치 네 까짓 게, 내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 성 싶으냐’란 느낌까지 안겨주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할머니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원모임이 만나 일본 정부를 향한 싸움을 함께 시작한다.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오랜 꿈인 수명연장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간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오정' 이니 '오륙도'니 하는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정년기간 짧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간단하다. 지금 준비하는 것.

노후 대비는 바로 지금부터

연금과 적립식 펀드로 서민 노후대책 고민 해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을 읽지 않는 편이 낫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거북하더라도 참아 주시길 바란다. 몇 가지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 보려 한다.

첫째, 2008년 한국인 평균 수명은 79.1세. 여러분이 그 나이가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는가? 그 때도 평균 수명이 79.1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태어나서 첫 직업을 갖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5년. 그렇다면 언제쯤 은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대개 25~30년이면 직업전선에서 뛸 수 있는 시간이 끝이 난다. 평균 수명까지 남은 25~30년은 어떻게 지낼 것인지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없다면 그 때 쓸 돈은 갖고 있는가, 아니면 모으고는 있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노후대책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젊어서 연금에 들고 펀드에 가입하는 건 여유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서민일수록 노후를 대비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모 금융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 필요한 돈은 은퇴 이전의 60% 정도라고 한다. 직장생활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면 퇴직 후에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 이 정도 소비를 무리없이 소화하려면 평소에 소득의 60%를 저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0만 원 벌 때 60만 원, 200만 원 벌 때 120만 원은 연금이든 적금이든 들어둬야 한다는 말이다. '4만큼 생활비





로 쓰고, 6만큼 저축하라'는 '4대 6 법칙'이나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 저축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다 같은 이야기다.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은퇴 후 25~30년은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서민들의 저축성향은 50%에도 턱없이 못미친다고 한다. 평균 저축률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은퇴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은 은퇴 이전 소득의 40%밖에 안된다고 한다. 20%가 부족한 것이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돌봤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게다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다들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저축 비율을 높여야 한다.

노후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노후에 고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목돈을 은행에 맡겨 놓고 이자로 생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사 놓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방법이다.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있거나 갖고 있는 목돈이 있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이라면 가장 손쉬운 노후대비책은 '연금'이다.

연금에 가입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뜻이다. 복리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연 수익률 6%일 때, 매달 10만 원씩 27세에 연금에 든다면 55세부터 5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37세에 시작한다면 23만 원으로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일 47세에 연금을 시작한다면 한 달에 받는 연금은 7만 3,000원에 불과하다.

물론 일률적으로 연금을 붓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젊을 때는 벌이는 적지만 나름 여유가 있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들면 결혼 자금부터 시작해서 주택자금, 교육비 등 돈 쓸 데가 많아진다. 40대에는 다시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20대, 30대, 40대로 올라갈수록 연금에 붓는 돈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좋다.

어떤 상품이 좋을까

노후 대비 한답시고 모든 저축을 연금에만 넣을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률로 목돈을 모으기 좋은 적립식 펀드와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연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은 다시 은행에서 다루는 연금신탁과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노후대비 상품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변액연금이다. 일반 저축상품처럼 공시이율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이용해서 공시이율보다 좀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이율도 다르고 중도에 돈을 찾을 수 있느냐의 여부 등이 모두 다르다. 가입하려는 사람도 소득 수준이 다르고, 급여생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제혜택과 보험혜택 투자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과 별도로 목돈을 모으는 데는 은행의 일반 적금과 적립식 펀드를 추천할 만하다. 25~35세 젊은 시절에는 펀드처럼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은 상품의 비중이 큰 것이 좋고, 45~55세가 되면 안정적인 저축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적금에 가입했다가 점차 적립식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직장 여성들이여! 당당하게 아이를 갖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46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글 | 김민영(한법률법인 나눔구성원 변호사) · 「미니법률」 저자 | 사진 | 박성희

늦은 결혼 때문에 빨리 아이를 낳으려 노력하는 김순풍 대리는 출산을 하게 되면 혹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어서 일과 출산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이다.



Q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다는데,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전, 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출산휴가)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출산휴가기간 이전인 임신기간에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출산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Q 출산휴가는 최대한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전과 산후를 합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그 중 45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출산 이후로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출산예정일 보다 출산이 지연되어 출산 이후의 휴가기간이 45일보다 적어지게 될 때는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연장해야만 한다.

Q 육아휴직 급여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만약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Q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얼마나 지급하게 되나요?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려주세요.

●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준은 고용보험법 제75조 내지 제7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대기업은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과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위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인데, 이에 대한 최종적인 지급의무는 종전과 같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기본급 이외의 수당도 포함)인데,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상한액은 90일간 405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Q 육아휴직은 최대한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 된 아기가 있는 근로자가 아기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기의 출생 후 만 3세가 되기 전에 1년 내의 기간으로 휴가의 시기와 기간을 자유로이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19조의 2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계일보

2009년 03월 18일

권익위 “부패신고자 3명, 1000만원대 보상금”

올 들어 정부보조금 횡령이나 공무원임용 청탁비리 등 각종 부패사건을 신고한 4명 가운데 3명이 1000만 원대의 거액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올해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모두 4명으로 총 지급액은 5496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가운데 3명에게 1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최대 보상금 수령자는 지난 2004년 선박의 ‘밸러스트 수(Ballast Water)’ 처리장치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던 한 업체의 직원 A씨로 1천6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업체가 이미 용도폐기된 미국의 기술을 사들인 뒤 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1억

3309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이를 옛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과정에서 응시생 부친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부당 합격시킨 모 군청 총무과장을 신고한 B씨도 1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친언니를 위장 취업시켜 5148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모 사회복지 시설 사무국장을 신고한 C씨는 1029만원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총 92명의 신고자에게 11억8231만 원이 지급됐다”며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119억298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東亞日報

2009년 3월 25일 12면 (사회)

방과후 컴퓨터교실 ‘바가지 수강료’ 서울 99개 초등학교 적발... 1억4044만원 반환 결정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중 상당수가 수강료를 비싸게 받거나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최근 컴퓨터교실 부실 운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9개 학교에서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70명을 경고 조치하고 76개 학교 관계자 130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과다하게 받은 수강료 1억4044만 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47개 학교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업체 선정에 부적절하게 했고, 52개 학교는 강의

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A초등학교는 수강료 인하 요인을 발견하고도 수강료를 내리지 않았고, B초등학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도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계산해 수강료를 더 받았다. 또 C초등학교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이런 부실 운영 탓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82곳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한 민간위탁업체의 경우 컴퓨터 시설장비 단가와 설치 공사비, 운영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 원의 부담이득을 올렸다고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서울신문

2009년 03월 17일 25면 (행정)

온라인민원 처리 법무부·병무청 으뜸 국민권익위, 39개 중앙부처 평가

39개 중앙부처 중 국민이 온라인으로 접수시킨 정부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법무부와 병무청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47만 9897건의 온라인 민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는 ▲민원 만족률 향상 정도 ▲불만족률 감소 정도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 정도 ▲민원답변 성실도 ▲민원감축 노력도 등 5개 지

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평가결과 부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법무부는 답변을 평균 3일 내에 완료했고, 우수 답변을 한 직원 사진을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우수 사례를 공개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청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병무청은 생계 곤란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며 병역 감면 상담을 해주고, 민원처리 성과는 그 직원과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평가에 반영시켰다.

이동규 기자 yidonggu@seoul.co.kr

연합뉴스

2009년 03월 05일 (정치)

“제2자유로 건설, 개간비 보상하라” 권익위, 주공에 권고... 경작권 양수받은 자는 제외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제2자유로 건설 사업에 따른 국유지 개간비 보상민원과 관련, 고양시 일산 장항동 일대 국유지를 개간해서 경작해온 주민들에게 개간비를 보상하라고 주택공사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월남한 주민 338세대는 정부가 1959년 월남민 정착 지원을 위해 장항동 일대 국유지인 갈대밭을 분배해 줬고 지난 50년간 개간해 왔다고 주장하며 개간비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현행법상 국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개간비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1959년 정부가 월남민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토지를 분배해서 경작하게 하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면제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자유로 건설 당시에도 개간비를 보상해 준 전례가 있는 만큼 개간비 보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나 토지를 처음부터 개간하거나 상속하지 않고 나중에 경작권을 양수받은 사람들은 최초 개간자가 아닌 만큼 개간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직원 반납급여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3월 16일 서대문청사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식

국민권익위원회는 5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수의 일정부분을 자율 반납해 소외·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국민권익위 소속 512명 직원 중 56.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직원 287명으로, 상임위원과 실장급은 월 봉급액의 4~6%,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4·5급 및 5급은 1~2%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동안 매달 약 1천7백만 원(연간 2억4백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한다.

한편 위원회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은 지난 2월부터 1년간 봉급의 10%를 떼어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오른쪽)과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3월 16일 협약식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명예상담위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종로구 계동소재 청렴교육관에서 명예상담위원 129명을 대상으로 '명예상담위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서울·경기지역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명예상담위원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국민권익위의 기능을 소개하고 부패신고나 고충민원신청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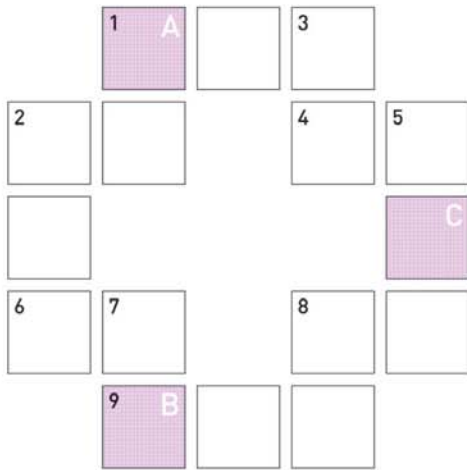
국민권익위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으로 명예상담위원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운영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연도 보내고~! 퀴즈도 풀고~!

『국민권익』은 독자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4월 25일)

‘기분 좋은 편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으신 여러분들의 감사편지로 이루어집니다.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민원처리 등에 관련한 수기를 이메일(junmin79@acrc.go.kr)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신문고

1+2월 퀴즈 당첨자

이미리내, 장중기, 이송애, 장훈, 이명섭

※ 문제 십자퍼즐을 채운 후 A, B, C에 들어갈 낱말을 조합하신 후 독자엽서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문제> 가로세로 십자퍼즐, 핵심단어를 찾으세요!

가로 열쇠

- 음악 따위를 효과적인 소리로 듣기 위한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먹는 물.
-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
- 족보로 보아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 온 큰집.
- 두부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음식.
- 여름밤에 서늘한 기운이 돌게 하기 위하여 끼고 자는 기구.

세로 열쇠

- 낮잠을 이르는 말.
-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을 가진 미개 인종.
- 능력은 안 되지만 남에게 지기 싫어서 부리는 마음. ○○를 부린다.
- 고려·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헌대를 고친 말.
- 동물의 몸을 감싸고 있는 질긴 겹질.
-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피어냄.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이미리내(충청북도 보은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의 임금 체불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리과정부터 해결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장중기(강원도 태백시)

운전한지 3년 정도 됐는데 항상 운전대에 앉으면 사고 날 것이 걱정입니다. 사고 때

보통 명함을 주고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상이 무섭습니다. '생활법률110' 코너를 보고 무조건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사고 접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송애(경기도 아천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식당을 개업하고 싶어 하셨는데 대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이란 기사에서 각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와 홈페이지까지 소개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장 훈(경기도 구리시)

'기분 좋은 만남' 코너에 소개된 조사관 글을 읽으면서,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호뭇함을 느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최선을 다하는 업무태도를 통해 행복의 참의미를 떠올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명섭(경상북도 안동시)

제가 사는 동네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가정을 소외계층으로 분류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누기 분류가 아닌 함께 어울리는 마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모두'처럼 문화에서 오는 괴리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책으로 접해보는 것... 너무 멋진 일 같습니다.